



보도시점

2025. 12. 30.(화) 06:00  
12. 30.(화) 석간

배포

2025. 12. 29.(월) 14:00

## 농식품부,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 주민주도 공동체를 통해 농촌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 공동체 육성·전달체계 개선·지원 기반 정비 등 3대 추진방향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 활성화 계획의 수립(법 제5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과소화\*로 인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복지·의료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다.

\* 인구 3천 명 이하가 되면 병·의원, 2천 명 이하가 되면 식당·세탁소 등 유지 곤란(KREI)  
인구 3천 명 이하 읍면비율 51.0%, 인구 2천 명 이하 읍면비율 26.9%(24.12월, 행안부)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은 시장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대 전략(①주체 육성, ②전달체계 개선, ③거버넌스 확립)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 ①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첫째, 주민주도 공동체를 통해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한다. ('25년 173개 → '28년 300개). 신활력플러스·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육성된 학습조직(액션그룹)과 지역 내 활동 중인 기존 주민 조직을 통해 마을 내 수요 파악부터 서비스 기획·운영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민공동체가 서비스 공급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는 2025년 40개에서 2028년 120개로 육성하고, 취약계층에 사회적 농업으로 교육·치유 기능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은 2025년 133개에서 2028년 180개로 육성한다. 서비스 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돌봄공동체(서비스 공동체) 지원사업: 평균 66백만원/연('25년 40개),  
돌봄농장(사회적 농장) 지원사업: 최대 55백만원/연('25년 누적113)

둘째, 서비스 공급 주체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진입(예비 공동체)-성장-성숙 단계별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동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마을파견 컨설팅\*'을 신규 도입해 관련 전문가 및 우수 선도 공동체가 직접 신규 공동체를 방문해 현장 중심으로 지원한다.

\* 마을파견 컨설팅: 선도 공동체 등이 서비스 제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추진 주체(마을리더 등)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셋째, 서비스 공급 주체의 자립 기반을 확충한다. 주민공동체 등 서비스 공급 주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 (안) 농촌 거주 부모님 등이 대신 이용 가능한 생활서비스 답례품으로 등록

## ②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첫째, 생활SOC 등 거점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 수요 기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농촌 지역의 생활 SOC를 확대('26년 1,181개소 → '28년 1,350개소) 하고, 기획 단계부터 배후마을과의 연계 및 운영 활성화를 고려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조성 이후 지역주민주도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관리를 담당\*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 사회적 협동조합의 SOC 시설 운영 현황: (~'23) <sup>누적</sup>6 → ('25.11.) 23

또한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확대('25년 465개 읍·면 → '28년 800개 읍·면)한다. 고령화율이 높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 현장을 고려하여 재택진료·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형태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를 연계하여 일상적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사막 문제에 대응하는 농촌형 이동장터도 단계적으로 확대('25년 9개소 → '28년 30개소)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①이동형, ②주문배달형, ③교통연계형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①이동형: 마을을 정기 순회 방문 ②주문배달형: 사전 주문한 생필품을 배달  
③교통연계형: 마을주민의 식료품점 이동지원

둘째,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동(교통)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 범위를 차량임차비까지 확대하고, 농번기 새벽·야간 육아 공백을 해소하는 틈새돌봄을 도입('26)한다. 또한 빈집 활용 민박, 빈집정비사업 등 농촌 지역재생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 민박: 농어촌민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법인·단체 참여 허용  
빈집정비: 「(가칭)빈집정비 및 관리 특별법」 제정,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사업자로 참여

이와 함께 법률·행정·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 퇴직자 단체와 협업하여 시니어 농촌활력단을 도입('26)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농촌맞춤형 봉사활동을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개편한다.

### ③ 농촌 서비스 거버넌스 확립

첫째, 전국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전국지원기관은 총괄 지원을, 지방정부와 지역지원기관(지방정부 지정) 등은 공동체 조직화 지원, 자체 사업 연계, 사업계획 심의·의결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방정부에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028년까지 15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또한, 광역지원 기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지역 단위 서비스 공급 체계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협약\*을 통해 지역별 생활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공급을 추진한다. 주민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 부족 현황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별 공동체 중심으로 분산 추진되던 서비스를 서비스 협약으로 연계하여 지역 단위 서비스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 주민공동체와 지원조직이 활성화된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전국 확산할 계획이다.

\* 서비스 협약: 주민이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직접 필요한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방정부가 협약 체결을 통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협약

셋째, 사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복지부) 전국 시행('26.3.)에 맞춰 서비스공동체가 통합돌봄 사업 내 일상돌봄·지역 특화돌봄서비스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지방정부 등과 협업한다. 또한, 읍면에 위치한 지역농협들의 주민 대상 생활서비스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생활편의시설(빨래방, 목욕탕 등) 운영 농협 대상으로 운영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에서 추진 중인 고령농 가사지원 등 사회공헌사업도 지속 운영·확대('25년 49억원 → '26년 51억원)한다.

- \* 일상돌봄: 노인맞춤돌봄, 활동지원, 긴급가사지원 등 일상생활 영역의 돌봄서비스
- 지역특화돌봄: 지방정부가 지역특색과 필요도를 반영해 수립하는 서비스로, 주민공동체가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시하고, 돌봄서비스 공급 주체로 기능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 및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계획 비전 및 전략
- 2. 과제별 주요 개선사항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송재원 (044-201-1571)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044-201-1574)

비전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서비스 실현

달성  
목표

- ◇ 농촌 서비스 개선 및 사각지대 최소화
- ◇ 주민공동체 기반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사회적 연대를 통한 지역맞춤형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전략 및 과제

3대 전략	세부 추진과제	주요 성과지표 (현재 → '28년)
1. 농촌 서비스 주체 육성	① 주민주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② 농촌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제고 ③ 공동체 대상 맞춤형 교육 제공	·공동체 수: 173개 → 300개 ·교육생 수: 500명/년 → 1,500명/년
2.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① 주민 수요 기반 서비스 공급 확대 ②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왕진버스 운영: 465개 읍면 → 800개 읍면 ·이동장터 운영: 9개 → 30개
3. 농촌 서비스 거버넌스 확립	① 공동체 기반 서비스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② 사업·정책간 연계 강화	·지방정부 활성화계획: '28년까지 15개 수립

## 붙임2

## 과제별 주요 개선사항

구분	현행	개선	비고
<b>1. 농촌 서비스 주체 육성</b>			
<b>① 주민주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육성('25년 173개 → '28년 300개)</b>			
공동체 육성	•협동조합 중심 공동체 발굴·육성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포함	
	•일상돌봄 중심 제공	•의료·교육 등 서비스 제공 분야 확대 * 의료사협, 교육공동체 등 연계	*시범운영('26) *확산('27~)
	•사회적 농장 지정제 활용 저조	•정책지원사업 지원조건과 연계하여 지정제 실효성 제고	*지원기관 역할 확대 적용('26)
	•거점농장 지원대상: 사회적 농장	•지원 범위 확대: 주민공동체 추가	
<b>② 농촌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제고</b>			
지원	•돌봄공동체 정액 지원	•중간 성과평가 후 차등 지원	
공동체 재정 기반 다양화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 주로 의존	•활용 재원 다양화*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방정부 공동체 지원사업, 햇빛소득마을 발전수입, 고향사랑기부금, 민간 크라우드 펀딩 등	*기본소득 도입('26) *지방정부, 행안부 협약('25~) *햇빛소득 마을 지침 수립('25)
<b>③ 공동체 맞춤형 교육 제공('25년 교육생 수 500명/년 → '26년~ 1,500명/년)</b>			
교육	•전국 단위 교육훈련기관 부재	•교육기관 지정('25.4.) 및 단계별 맞춤형 교육 제공	*커리큘럼 마련('25) *교육 시행('26.4.)
	•공무원의 현장 인식 저조	•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영상교육 제공	*영상제작('26~)
<b>2.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b>			
<b>① 주민 수요 기반 서비스 공급 확대(왕진버스 '25년 465개 읍면 → '28년 800 / 이동장터 9 → 30)</b>			
SOC	•SOC 시설 주민 참여 미흡	•주민공동체 참여 확대 위해 <sup>가칭</sup> 농촌 재생협의체 운영, 참여 인센티브 마련	*일반농산어촌 지침 개정('26)
왕진 버스	•신체건강 중심 진료, 현장 이동 필요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재택진료 도입,	*일부지역 시범('25) *전국추진('26)
이동 장터	•농촌형 이동장터 시범지구 운영	•단계적 확대('25년 9개소 → '28년 30)	
<b>②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b>			
교통	•돌봄공동체의 차량 임차 제한	•이동서비스 제공 시 차량 임차 허용	
보육	•농번기 새벽·야간 육아 공백 발생	•육아도우미 양성 통한 틈새돌봄 제공	*시범도입('26)
농촌 재생	•농촌재생사업(민박, 빈집)에 민간 참여 제약	•빈집활용 민박, 빈집정비사업에 사회적 협동조합 등 참여 기능	*도농교류법, 농촌빈집정비법 제개정('26)
<b>3. 농촌 서비스 거버넌스 확립</b>			
<b>① 공동체 기반 서비스 거버넌스 체계 구축('28년까지 지방정부 활성화계획 15개 수립)</b>			
기반	•지역 서비스 거버넌스 부재	•중앙·지방정부, 전국지역지원기관, 지역 위원회, 서비스공동체간 거버넌스 구축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추진 및 지방 정부별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시범지역 선정('25) *시범사업 추진('26)
<b>② 사업·정책간 연계 강화</b>			
연계	(신 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연계 협의	*복지부 협약('25~)
민간	•생활서비스 제공 지역농협 인센티브 부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농협에 지도복지자금 지원	*중앙회 협약('25) *기준개선('26)